



홈페이지



페이스북



카톡채널

보도자료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십시오

배 포 일	2022. 11. 17.(목)	사진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진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수 : 3매
담당	분권연구실	김경남 선임연구위원 T. 033-250-1325 E. robert00@rig.re.kr

[강원포럼] 2022년 강원산림정책 포럼 제2차 정책포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, 산림행정의 결정권과 집행권 이관을 희망한다

-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,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자치특례 개발이 한창이다. 이 중 토지이용규제로 많은 행정 계획이 좌초된 경험을 지닌, 강원도는 산지와 산림을 대상으로 한 정책 특례를 개발 중이다.
- 2007년 지방산림청 사무의 강원도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임업이 추진되었다.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 사무이관을 눈앞에 뒀으나, 당시 탄핵정국에서 유야무야된 사례가 있다.
- 금번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연구원(원장 현진권)과 (사)강원산림포럼(이사장 우종춘)은 자치임업 인식의 불업을 위해 11월 17일(목) 14시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하였다.

- 이날 포럼에서는 자치임업의 의의와 달성을 위해 우종춘 이사장과 강원연구원 김경남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. 각각의 주제는 “강원특별자치도 시대, 자치임업” 과 “진정, 우리는 자치임업을 희망하는가?” 이었다. 발제를 통해서 자치임업의 제도화 방향, 현재의 추진경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소개하였다.
- 뒤이어 22년 상반기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주제로 2명이 발제하였다. 자치임업 시대, 동해안 산불을 사전 예방하고,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.

주요 토론 내용

- 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, 자치임업의 제도화 방향
- ② 강원특별자치도 시대, 자치임업을 위한 특례 개발 방향
- ③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
- ④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, 자연복원 Vs 인공복구의 장단점

- 본 포럼을 통하여 강원연구원과 산림포럼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자치임업의 내용을 검토하고, 수정·보완함으로써 23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발족시 보다 완성도 높은 산림행정 체계 구축에 일조하고자 한다.



